

# “의대 증원, 500명이하 속도조절 필요하다”

###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미봉책에 불과” 주장 “정부가 겁박만 일삼아선 전공의 끌어내지 못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 의사단체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의대 정원을 늘리되 규모, 방법, 속도 등을 조절해야 한다는 의과사회의 주장이 나왔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스위트호텔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세라 회장은 “의대 증원에는 찬성한다”면서도 “2000명 증원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8%로 묶인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약 500명 정도의 증원은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사회에서 진행된 의대 증원 관련 설문 결과를 제시하며 “약 25%가 증원에 찬성했으며, 다수가 500명 이하 규모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필수의료 지원에 10조원 플러스 알파를 투자한다는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제대로 된 재정 지원 계획이 빠진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문제의 핵심은 기피 과의 낮은 수가이고, 정부가 이를 수십 년간 바꾸지 않고 방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겁박만 일삼아선 자발적으로 의업을 포기하고 숨어버린 전공의들을 끌어내지 못한다”며 “구속이나 처벌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건 협상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잘못된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시도하면 성공할 수 없다”라며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게 현 의료체계가 잘못됐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우선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들을 향해서는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필수요를 살리고, 기피 과와 타과 사이에 균형을 맞추며 전공의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사 스스로 자정을 하자는 의미의 ‘메디컬 프로페셔널리즘’을 제안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의료 정책을 개선하는 작업에 정부뿐 아니라 의사들의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거나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한 명단 공개와 악성 댓글이 잇따르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환자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현장에서 밤으로 헌신하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인으로서 힘들고 지치더라도 오늘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희면기자



### 광주시선관위, 9개 장애인 유관 단체와 정책간담회 개최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광주시선관위 4층 대회의실에서 장애인차별 철폐연대, (사)광주광역시교통약자지원센터 등 9개 장애인 유관 단체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슬비기자



### 담양경찰 고서파출소, SI 피싱사기 예방홍보 활동

담양경찰서 고서파출소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이하여 지역민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와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담양=박종영기자



### 광양경찰, 개학기 등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광양경찰은 개학기를 맞아 교통사고 학교폭력 등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굣길 조성을 위하여 7일 광양 중동에 있는 중진 초등학교 앞에서 광양녹색어머니회·중진 초등학교와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광양=기동취재본부



### 나주경찰, 생활지원사 대상 노인 범죄 예방 관련 간담회 개최

나주경찰서는 나주 관내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나주=송준표기자



### 무안경찰, 청소년 비행 예방 위한 민·학·형 합동순찰 전개

무안경찰서는 지난 7일 저녁시간대 민·학·경이 협업하여 청소년 탈선 예방 위한 유해환경 지도·단속 및 취약지 집중 합동 순찰을 실시하였다.

무안=이기성기자



### 구례소방, 산수유꽃 축제장 관계기관 합동 안전 점검

구례소방서는 구례 산수유꽃 축제를 맞아 불철 화재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구례=박진호기자

## ‘의료 대란’ 법률상담 보름간 127건...실제 피해 더 클 듯

### ‘수술 연기’ 86건...실제 피해 더 클 듯 “중증 환자들 약착같이 버티고 있어”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정부가 환자들의 피해와 관련해 보름간 127건의 법률상담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대란 4주차인 이번 주부터는 응급·중증환자들이 입는 피해가 보다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의사집단행동 피해 법률지원단’ 및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서 실시한 법률상담은 총 127건이었다.

피해 유형으로는 ‘수술 연기’가 8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수술취소 13건 ▲진료거부 8건 ▲입원지연 3건 ▲기타 17건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구조 신청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암환자권익협회의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단체들에 따르면 한 암환자의 경우 서울의 한 대

학병원에서 최근 암 검사를 마친 뒤 지난 6일 첫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왔으나 병원 방문 당일 치료를 거부당했다.

병원 사정으로 더 이상 신규 암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이 환자는 수도권에 다른 대학 병원들에 문의했으나 모두 같은 답을 들었다고 한다.

다른 암환자는 지난 2월 말 병원에서 “중요한 개인 사정으로 외래 시간을 변경하려 했으나 절대 불가하며 예정된 외래조차 취소될 수 있으니 예정된 시간이라도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응대를 겪었다”고 밝혔다.

환자단체에선 정부에 접수된 것보다 실제 피해가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피해 신고를 하지 않는 환자들이 많다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도 치료가 한창이라면

소송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이미 사망 등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을 맞은 게 아니거나 고서야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라는 말이다.

김성주 암환자권익협회 대표는 “대형병원에 가는 사람들은 오랜 고민을 통해 의사와 병원을 결정한다”며 “(일정) 지역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치료를 안 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현재까지는 환자들이 일정 연기로 인한 불륜·불만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 앞으로는 그 이상의 회복이 어려운 피해가 예상된다.

보통 항암치료는 3-4주 주기로 진행된다. 이 점을 고려하면 의료 공백 4주차가 중증환자들이 버틸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안기중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전문의, 간호사 등 의료진들이 버티고 있는 것처럼 환자들도 약착같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며 “생명이 달린 문제인 만큼 환자 사고 발생 전 정부와 의료계가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유나기자



민주노총, 윤석열 정권 퇴진, 노동권·사회공공성 쟁취 노동자 행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앞에서 프레스센터 방향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 노동권·사회공공성 쟁취 노동자 행진을 하고 있다.

## 타인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 200차례 처방...3000정 복용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수면 장애를 이유로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상습 복용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사기와 국민건강보험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보호 관찰과 약물 치료 강 40시간 수강 등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광주 소재 병·의원 등지에서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복수의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로 200여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량 처방받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타인 명의를 바꿔가며 받은 처방·진료를 받으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 급여를 각 병원·약국에 과다 지급하게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극심한 수면 장애를 겪으면서 수면제가 필요할 때마다 명의의 도용 진료·처방을 통해 구한 졸피뎀을 한 번에 무더기 복용했다. 지난 2020년부터 3년여 동안 투약한 향정신성 의약품만 3000정이 넘는다고 한다.

다른 사람 명의로 진료를 받고 내시경 검사용 프로포폴 주사 투약도 4차례 받기도 했다.

앞서 A씨는 과거에도 향정신성 의약품 다량 투약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로 선처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과다 처방 받아 투약한 것으로 죄책이 가법지 않다. A씨의 약품 중독·의존성이 심각한 것으로 보이고 이미 비슷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전력도 있다”며 “심각한 수면 장애로 인해 범행을 했고 6개월가량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치료를 받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슬비기자